

신년사



정 상 훈

- 월간 『考試界』 발행인
- 도서출판 『고시계사/미디어 북』 대표
- 법무경영교육원 원장
- (사)한국잡지협회 잡지교육원 원장
-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유라시아세계본부 글로벌 지원 의장

정도를 걷는 사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가라앉히는 겨울의 찬 냉기는 아직은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소파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가슴속에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한다.

매일 같은 하루임에도 365일을 나누어 1년을 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까닭은 매너리즘을 종식시키고, 각자의 가슴속에 새로운 열정과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지난해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단하고 힘들었던 한 해였다. 다시 희망의 꿈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기 위하여, 어제의 흔적을 지우고 새롭게 내딛는 첫 발자욱 앞에서 ‘나’만이 아닌 ‘남’을 위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도전해 보고자 다짐해 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 행해진 코드인사는 헌법적 원리인 『법의 지배원리(the Rule of Law)』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판사·검사직을 접으면서 바로 정당공천이나 고위공직을 주는 정치권 행태가 또한 사법권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의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된 이동재 前 채널A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사유, 유재수 前 금융위국장에 대한 1심재판부의 집행유예, 대법원의 은수미 성남시장의 무죄취지의 판결,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 판결 등에서 국민들은 친여권 인사들에게만 유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무리한 논리를 동원하는 흐름이 보인다고 불신하고 있다. 김명수 現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을 짊어졌다.”고 늘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신뢰받는 재판이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라고 생각된다. 과연 최근 나오는 판결들이 좋은 재판의 결과물인지, 이런 판결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냉철하게 반성하여야 한다.

지난 12월 10~15일 사이에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원전수사와 울산시장 선거수사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5·18왜곡금지법도 ‘국가에 의한 역사독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異見을 봉쇄한 박근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대북 전담금지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주민의 외부소통 기회를 차단하는 反인권 악법이다. 미국의회의 초당적 인권기구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하여 ‘시민적 정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연례 인권종교자유보고서에 감시 대상에 올리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개정상법은 헤지펀드의 경영개입의 용이성과 주주사이에 심각한 불공정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위험적인 법률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들이다. 헌법수호를 위하여 설치된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바로 나서야 할 때라 생각된다.

부동산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25여 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렸지만 부동산 폭등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허둥대고 있다. 집값을 때려잡겠다며 이쪽을 때리면 저쪽에서 뛰고, 개발계획을 발표하면 주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굽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뢰를 상실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수록 악화일로다. 젊은 세대들은 ‘이생집망’(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임대료와 전월세도 속수무책으로 치솟으면서 민생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수도권외의 대다수 아파트 가격이 몇 달 만에 몇억원씩 치솟았다. 도시근로자의 10년치 봉급보다도 더 큰 금액이다. 집을 마련하려 했던 사람들은 몇억원을 빼앗긴 셈이다. 지난 3년간 수도권 일부 아파트의 가격은 두 배 정도 올랐다.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수시로 뛰는 전월세와 임대료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이다. 그 결과로 모든 물가가 뛰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징벌적 세금폭탄을 떨어뜨리자 사람들은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우리에게 왜 무거운 세금을 매기느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달랑 집 한 채뿐인 가난한 은퇴자들은 급등한 세금을 감당할 길이 막막하다고 한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 들었으면 지금까지 펼친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게 도리라고 생각된다. 정치문제야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통계·수치로 드러나는 각종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은 미숙한 국정운영과 이념과잉, 인사 난맥 때문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집권 초기도 아닌 지금에서까지 남탓으로 일관한다면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많은 이들은 최근 한국사회에 ‘계층 사다리’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은 사법시험 폐지이다. 정부는 2009년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했지만 로스쿨 등록금 자체가 비싼데다 학업과 변호사시험 준비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어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입학에 엄두를 내기도 어렵거니와 입학 이후에도 학업을 이어나가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로스쿨

측은 매년 취약계층 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주는 등 보완책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로스쿨 미졸업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법시험을 병행하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도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로스쿨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한다.”며 사법시험 부활을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다.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로스쿨 외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시험절차가 남아있지만, 한국은 유독 로스쿨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지난 70여 년 동안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를 이끌어갈 동량을 키워내는데 일조하겠다는 창간 당시의 굳은 결심이 퇴색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앞으로도 변호사시험, 5급 공채(행정고시),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시 등과 관련된 수험소식과 자료는 물론이고, 다양한 법률에 관련된 소식에 목말라하는 애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辛丑年 새해에는 큰 꿈을 향해 뛰어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으며,택내 가정 가정에도 건강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